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2017. 7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작성자 : 과장 김경근, 조사역 이현우



목 차

〈 요 약 〉

I. 검토 배경	1
II.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 현황 및 전망	2
III.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의 주요원인	10
IV. 대전·충남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 점검 ...	20
V. 정책적 시사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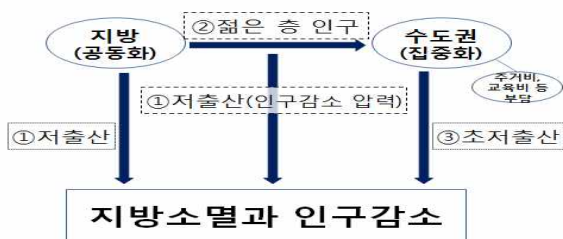
【 요약 】

1 (검토배경)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리스크*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일본 등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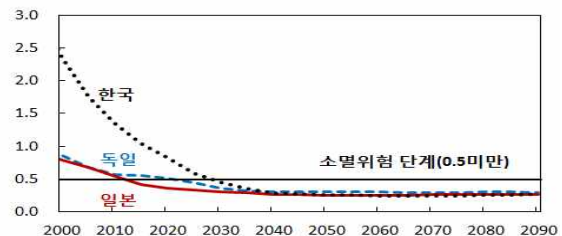
* 지방소멸이란 일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前 일본 총무장관, 現 도쿄대 교수)가 처음 창안한 용어로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활용 중임. 마스다 히로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대비 20~39세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 최근 일본 등에서 젊은 층 인구의 수도권집중과 인구감소 효과로 인해 지방소멸 논의가 크게 부각되고 정책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메커니즘



일본·독일의 지방소멸지수



주: 1) 중위인구 기준

자료: 일본 마스다보고서(2014.8월)에서 수정 작성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

2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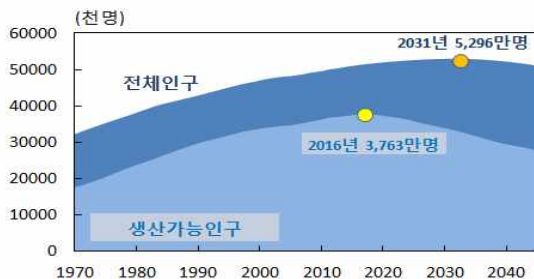
- ① **인구감소**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금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2016년 3,763만명 → 2017년 3,762만명)될 전망이며 **총인구**도 **2031년(5,29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

- ② **지방소멸** :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7.3월말 0.97**로 **주의단계**에 진입

* 1.0 이하는 지방소멸 주의단계, 0.5 미만은 지방소멸 위험단계로 각각 구분

- 시·군·구(총 228개)별로 **위험단계** 지역을 보면, **2017.3월말 85개**(37.3%)에서 **2040년에는 217개**(95.2%)로 크게 **확대**될 전망(수도권 지역 63개)

우리나라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지방소멸위험 지수 및 지역 수



자료: 통계청 자료로 자체 시산

3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의 주요원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를
 동시에 초래하는 ① 저출산, ② 젊은 층의 수도권집중, ③ 수도권의 초
 저출산 등의 현황 및 요인은 다음과 같음

① **저출산** : 2016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2.1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OECD평균(2013년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등 세계 최저 수준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 고용불안 등으로 결혼에
 소극적인 데다 결혼부부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율 갭(희망출산율
 - 실제출산율)이 매우 높은 데 주로 기인

출산율 갭(Gap) 국제비교¹⁾

	희망 출산율(A)	실제 출산율(B)	갭(A-B)
한국	2.25	1.21	1.04
핀란드	2.58	1.83	0.75
덴마크	2.48	1.75	0.73
스웨덴	2.41	1.90	0.51
프랑스	2.33	2.00	0.33
독일	2.12	1.39	0.73
스페인	2.11	1.34	0.77
이탈리아	2.01	1.39	0.62
OECD 평균	2.27	1.59	0.68

주: 1) 한국 2015, 그 외 2011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희망 아이수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¹⁾

	경제적 부담	고령출산 기피	임과 육아 불가 (%)
한국	76.0	33.3	25.6
일본	41.2	32.4	22.4
미국	32.1	12.5	1.8
프랑스	18.1	22.9	9.6
스웨덴	3.2	29.0	0.0

주: 상위 3개 요인(복수 응답), 2010년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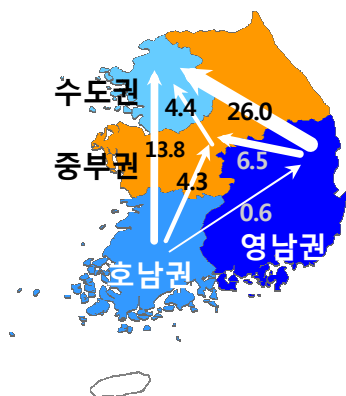
②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 지난 10년간('07~'16) 지방 젊은 층(20~39세 기준)의
 수도권 유입인구는 43.6만명으로 총인구 기준 유입규모(14.9만명)를 상회
 (베이비부머 등은 은퇴 이후 수도권으로부터 유출)

-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과 정주여건 격차에 주로 기인

* 수도권 이동 요인을 인구이동 순편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삶의 질 여건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 가운데 20~30대는 임금 및 양질의 일자리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20~30대 인구의 권역간 순이동

(천명)



주: 2016년, 제주(순유입 4.7) 제외
 자료: 통계청

지방·수도권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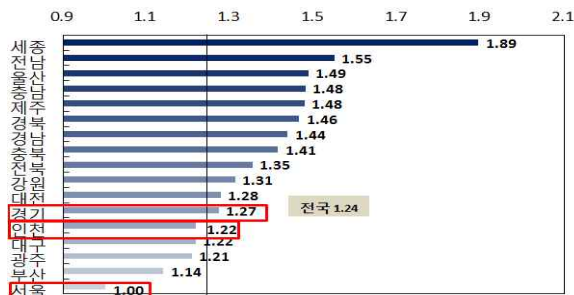
	고용 여건	삶의 질 여건
20 ~ 30대	Pull 요인: 임금, 양질의 일자리 비중	도로포장률, 문화기반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대학생수
	Push 요인	전세가격, 사회복지시설수
40 ~ 50대	Pull 요인: 고용률	도로포장률, 문화기반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대학생수
	Push 요인	전세가격, 사회복지시설수
총 인구	Pull 요인: 양질의 일자리 비중	도로포장률, 문화기반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대학생수
	Push 요인	전세가격, 사회복지시설수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자체분석

③ **수도권의 초저출산** : **수도권**과 **지방**의 **출산율 배율**(수도권/지방)은 1995년 최초로 기준치(1.0배)를 하회한 후 2015년에는 **0.85배**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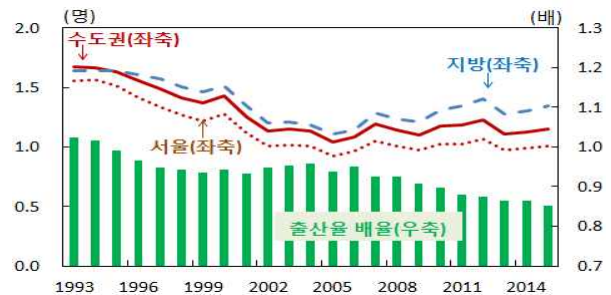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수도권 거주 젊은 층의 결혼 및 출산 기피 등에 주로 기인

시·도별 출산율¹⁾



주: 1) 2015년 합계출산율 기준
자료: 통계청

수도권 및 지방의 출산율¹⁾



주: 1) 출산율 배율은 수도권 / 지방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4 (대전·충남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 점검) 대전·충남지역은 대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권역간 격차(충남 북부 및 남부 등)가 상당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유의할 필요

- 젊은 층이 교육 및 취업을 위해 단계적이며 순차적으로 이동(충남 남부 → 대전 → 수도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가운데 특히 대전지역 젊은 층은 취업기회가 많은 수도권 등으로 지속 유출

* 대전지역의 경우 대졸자 역내 취업율(2014년)은 39.6%, 구인배율(신규구인인원수/신규구직자수, 2015년)은 0.45배로 각각 전국 평균(47.9%, 0.59배)을 하회하고 있으며 지방 5대 광역시중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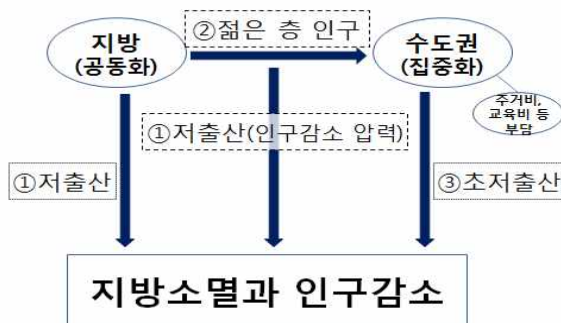
5 (정책적 시사점) 지방소멸 리스크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인구문제와 연관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출산율 제고와 수도권 집중 억제 등 두 트랙으로 추진할 필요

- 정책역량을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 억제 등 두 트랙 대책에 집중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
- 대전·충남지역도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대책, 권역간 불균형 해소 등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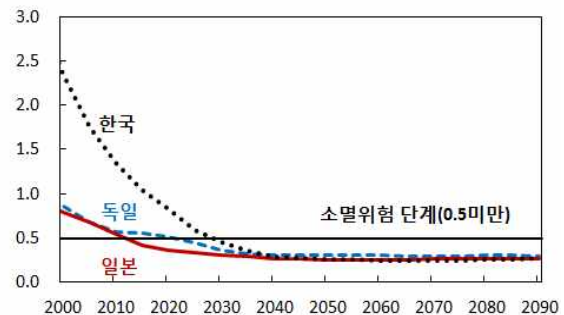
I. 검토 배경

- 최근 일본, 독일에서는 젊은 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인구감소 효과가 가세하면서 지방소멸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논의가 크게 부각
 - 지방소멸은 지방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젊은 층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주거비 상승 등 결혼 및 출산 여건 악화를 초래해 대도시의 초저출산을 야기함으로써 인구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대응방안을 모색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메커니즘



일본·독일의 지방소멸지수



주: 1) 중위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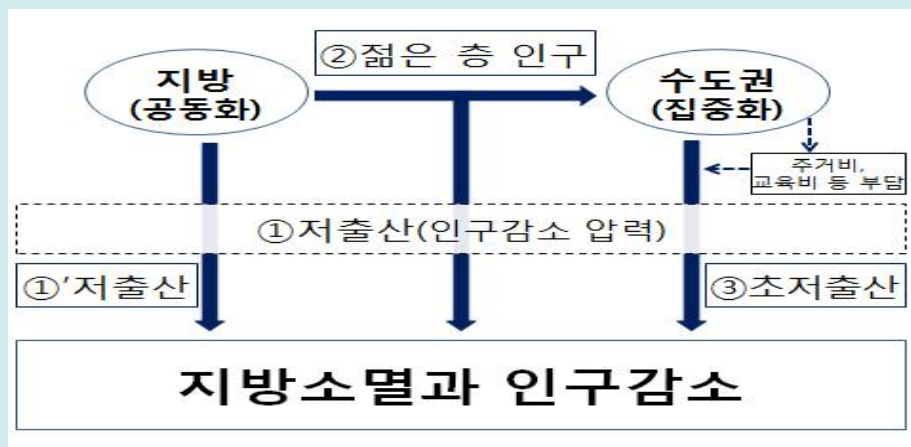
자료: 일본 마스다보고서(2014.8월)에서 수정 작성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

- 특히 일본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책을 경제 및 재정 운영과 개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응, 도쿄 일극집중에 대한 대책 등 두 트랙(Two-track)으로 정책역량을 집중
 - 저출산·지방소멸 리스크를 국민 전체가 공유하고 향후 안정된 인구규모 확보 도모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과 지방 활력 촉진을 통한 도쿄 일극집중 경향을 방지할 종합정책(「長期ビジョンと総合戦略」, 일본 내각부, 2014.11월) 추진
-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젊은 층의 서울 등 수도권 선호에 따른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
 - ⇒ 저출산·젊은 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등에 따른 우리나라 및 대전·충남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리스크를 점검해 보고 일본 등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II.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 현황 및 전망

-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소멸 리스크에 대해 우려
 - 지방은 저출산과 젊은 층 인구의 수도권 유출, 수도권은 주거비, 교육비 부담 증가 등 결혼 및 출산 환경 악화에 따른 초저출산에 직면
- ◆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3월말 0.97로 기준치(1.0)를 하회하여 주의단계에 진입
 - 시·군·구(총 228개)별로 위험단계(0.5 미만) 지역을 보면, 2017.3월말 85개(37.3%)에서 2040년에는 217개(95.2%)로 크게 확대될 전망(수도권 지역 6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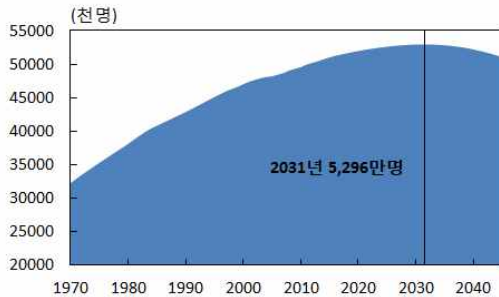
1 인구감소 리스크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6년 현재 5,125만명이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어 2031년에는 5,296만명을 최고치로 감소로 전환될 전망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7.6월) 기준으로 매년 7.1일 시점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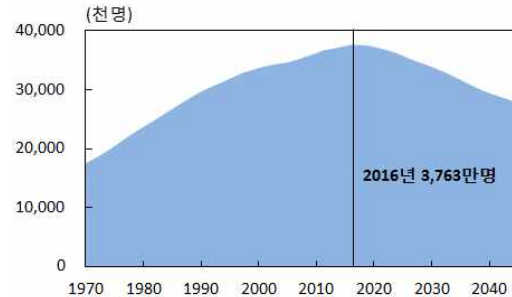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명에서 금년 3,762만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 인구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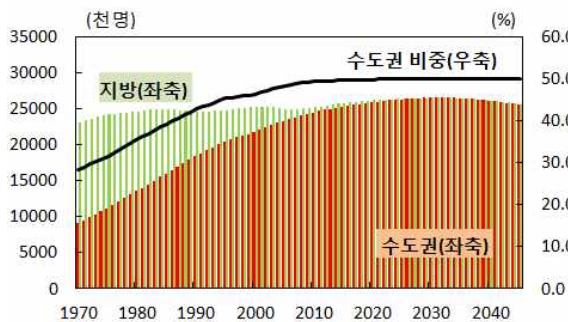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지방 인구가 각각 2016년 2,537만명, 2,588만명에서 2031년 2,649만명, 2,647만명으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로 전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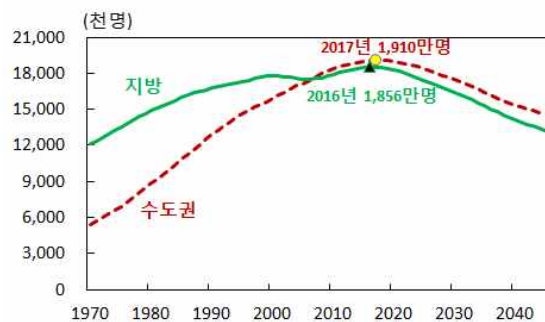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도 지방이 2001~2005년중 감소한 후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6년(1,85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도 2017년 1,910만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

수도권과 지방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수도권과 지방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중 부산, 서울, 대구, 전북,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경북, 경남 등 3개 지역도 전국평균보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도 전국적 감소가 시작되는 금년 이전에 이미 부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북 등 5개 지역에서 감소가 진행중

시·도별 전체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점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전북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전남	대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제주
전체인구	2032	1996	2010	2012	2016	2016	2030	2030	2031	2032	2035	2035	2038	2039	2040	2042	-	2045
생산가능인구	2017	2012	2010	2012	2016	2017	2017	2017	2017	2017	2015	2021	2020	2017	2020	2023	2045	2028

주: 1) 2045년까지의 추계인구 기준, 세종 전체인구는 증가 예상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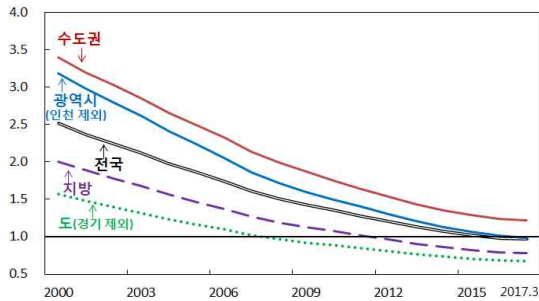
2 지방소멸 리스크* 현황 및 전망

* 일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前 일본 총무장관, 現 도쿄대 교수)가 정의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소멸 주의단계, 0.5 미만일 경우 지방소멸 위험단계로 각각 구분

가 전국 및 광역시·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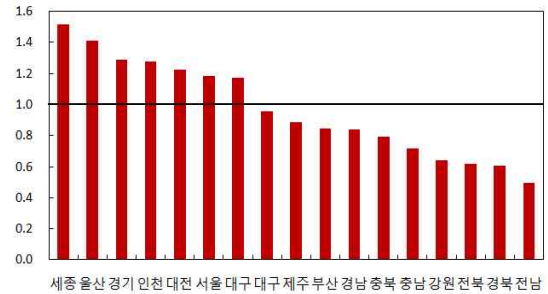
-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7.3월말 현재 0.97로 기준치(1.0)를 하회하며 지방소멸 주의단계에 진입
 - 젊은 여성인구(20~39세) 수가 686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710만명을 하회(-24만명)
 - 한편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00년말 2.51에서 2016년말 0.98로 크게 하락 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하락세가 지속되어 3월말에는 0.97로 추가 하락
- 시·도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광역시 및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기준치를 하회
 - 수도권은 서울 등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상회(서울 1.16, 경기 1.26, 인천 1.25)
 - 광역시(인천 제외)는 부산(0.82) 및 대구(0.93)지역이 기준치를 하회하였고 도 지역(경기 제외)은 모든 지역이 지방소멸 주의단계(전남 0.49, 경북 0.59, 전북 0.61, 강원 0.62, 충남 0.70, 충북 0.78, 경남 0.82, 제주 0.88)
 - 특히 전남은 0.49로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

전국 소멸위험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로 자체 시산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¹⁾



주: 1) 2017.3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로 자체 시산

광역 시·도별 인구 및 소멸위험지수의 변화

(만명)

	전체 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 이상 인구			소멸위험지수		
	'00.12월	'16.12월	'17.3월	'00.12월	'16.12월	'17.3월	'00.12월	'16.12월	'17.3월	'00.12월	'16.12월	'17.3월
전국	4,773	5,170	5,171	841	688	686	335	700	710	2.51	0.98	0.97
서울	1,031	993	993	195	153	153	56	130	132	3.50	1.18	1.16
부산	380	350	349	66	45	45	23	54	54	2.90	0.84	0.82
대구	252	248	248	46	31	31	15	33	34	3.09	0.96	0.93
인천	255	294	294	47	41	41	14	32	33	3.39	1.27	1.25
광주	137	147	147	25	20	20	8	17	18	3.26	1.17	1.15
대전	139	151	151	26	21	21	8	17	17	3.39	1.22	1.20
울산	104	117	117	19	15	15	4	11	11	4.60	1.41	1.37
세종	-	24	25	-	4	4	-	2	2	-	1.51	1.52
경기	922	1,272	1,275	172	177	177	52	137	140	3.28	1.29	1.26
강원	155	155	155	25	17	17	14	27	27	1.71	0.64	0.62
충북	150	159	159	25	19	19	14	24	24	1.81	0.79	0.78
충남	192	210	210	29	25	25	21	35	35	1.36	0.71	0.70
전북	200	186	186	31	21	21	21	34	34	1.52	0.62	0.61
전남	213	190	190	30	20	20	25	40	40	1.18	0.50	0.49
경북	280	270	269	44	30	29	30	49	50	1.47	0.60	0.59
경남	309	337	337	52	40	40	26	48	49	2.00	0.84	0.82
제주	54	64	64	9	8	8	4	9	9	2.16	0.88	0.88

주: 말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나 시·군·구별 현황

* 상세한 사항은 <참고 1>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역 분포」 참조

□ 2017.3월말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단계(0.5 미만) 지역은 85개로 전체의 37.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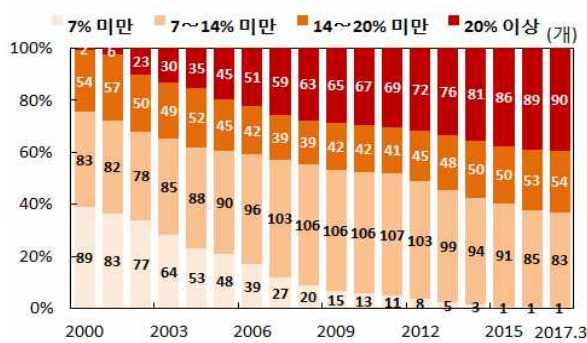
○ 수도권은 2006년 처음으로 1개(인천)가 발생한 이후 2014년 5개(7.6%)로 확대(인천 2, 경기 3)

- 광역시(인천 제외)는 2016년 처음으로 부산(동구 0.491 및 영도구 0.499)*에서 2개(5.1%)가 발생하였으며, 도 지역(경기 제외)은 2001년 4개가 발생한 이후 금년 3월 78개(63.4%)로 빠르게 확산

* 이는 지역 인근 신도시 개발(해운대구, 경남 양산 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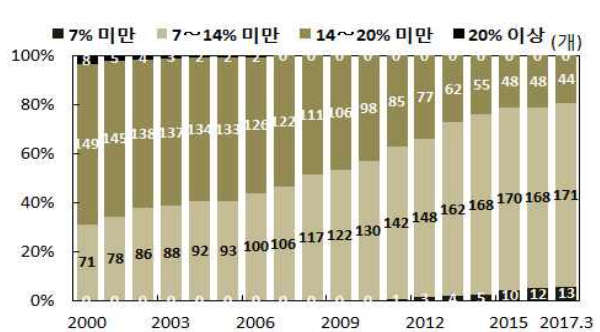
- 특히 경북(17개 73.9%), 전남(16개 72.7%), 전북(10개 71.4%)은 기초지자체의 70% 이상이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상황

연령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시·군·구별 분포



주: 통계청 통계로 자체 시산

연령별 20~39세 여성인구의 시·군·구별 분포



주: 통계청 통계로 자체 시산

광역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수(시·군·구 기준) 추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3
서울 (2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 (10)		0	0	0	0	0	0	1	1	1	1	1	2	2	2	2	2	2	2
경기 (31)		0	0	0	0	0	0	0	0	0	0	0	1	2	3	3	3	3	3
수도권 (66)		0	0	0	0	0	0	1	1	1	1	1	2	3	4	5	5	5	5
부산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대구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산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역시 (3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강원 (18)		0	0	0	0	0	0	0	0	1	2	4	5	7	7	7	7	8	9
충북 (11)		0	0	0	2	2	2	2	3	4	4	5	5	5	5	5	5	5	5
충남 (15)		0	0	0	1	2	3	3	3	4	6	6	6	7	9	9	10	10	10
전북 (14)		0	0	2	2	4	6	7	8	8	8	10	10	10	10	10	10	10	10
전남 (22)		0	2	4	7	8	10	11	15	15	15	15	16	17	17	17	17	16	16
경북 (23)		0	1	3	4	8	8	10	11	13	13	13	14	14	15	16	16	16	17
경남 (18)		0	1	3	5	5	6	7	8	9	9	9	9	10	10	10	10	11	11
제주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세종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도 (123)		0	4	12	21	29	35	40	48	54	57	60	65	70	73	74	75	76	78
합 계 (228)		0	4	12	21	29	35	41	49	55	58	61	67	73	77	79	80	83	85

주: 1) 228개 기초지자체중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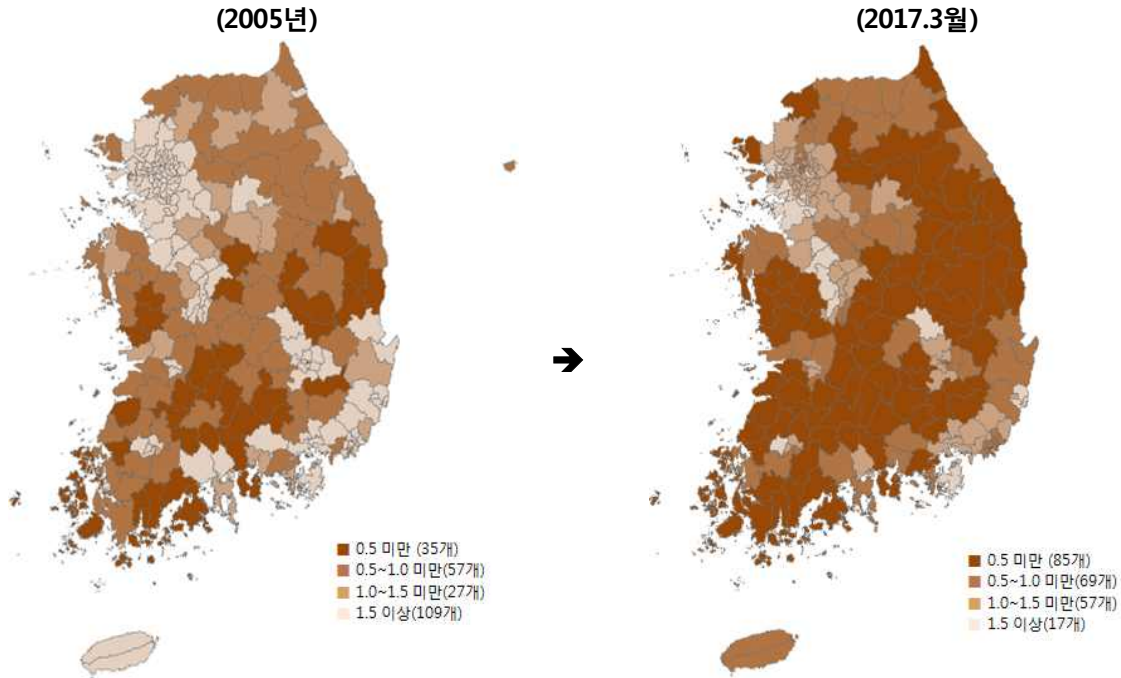
2)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참고 1>

전국 소멸위험지역(시·군·구 기준) 분포

□ 2005년말 35개에서 2017.3월말 85개로 확대



자료: 통계청 통계로 자체 시산

소멸위험지역(시·군·구 기준) 현황¹⁾

지역	소멸위험 지수	지역	소멸위험 지수	지역	소멸위험 지수	지역	소멸위험 지수
경북 의성군	0.16	경남 함양군	0.24	경남 창녕군	0.30	인천 옹진군	0.37
전남 고흥군	0.17	충북 보은군	0.24	경남 고성군	0.30	전남 영암군	0.37
경북 군위군	0.18	전남 장흥군	0.24	충북 영동군	0.30	경북 울릉군	0.38
경남 합천군	0.18	전북 진안군	0.24	충남 태안군	0.30	경북 영주시	0.38
경남 남해군	0.18	경남 하동군	0.25	강원 양양군	0.31	전남 화순군	0.40
경북 영양군	0.20	전북 무주군	0.25	강원 고령군	0.31	충남 보령시	0.41
경북 청송군	0.20	충남 부여군	0.25	강원 영월군	0.31	충남 논산시	0.41
경북 봉화군	0.21	전남 구례군	0.25	전남 담양군	0.32	강원 홍천군	0.41
경북 영덕군	0.21	전북 고창군	0.26	충북 옥천군	0.32	경기 가평군	0.42
전남 신안군	0.21	전북 장수군	0.26	경북 문경시	0.33	경기 연천군	0.43
전남 보성군	0.21	인천 강화군	0.26	강원 횡성군	0.33	경기 양평군	0.44
경북 청도군	0.21	전남 완도군	0.26	전남 장성군	0.33	충남 공주시	0.44
경남 산청군	0.21	전남 강진군	0.26	강원 고성군	0.33	강원 삼척시	0.47
경남 의령군	0.21	전북 순창군	0.27	전남 영광군	0.33	부산 영도구	0.47
전남 함평군	0.22	전북 부안군	0.28	경북 울진군	0.34	경남 함안군	0.47
충남 청양군	0.22	충북 단양군	0.28	강원 정선군	0.35	부산 동구	0.48
충북 괴산군	0.22	경북 상주시	0.29	경북 영천시	0.35	강원 태백시	0.48
충남 서천군	0.23	경북 성주군	0.29	강원 평창군	0.35	충남 홍성군	0.49
경북 예천군	0.23	전남 해남군	0.29	경남 거창군	0.35	경북 안동시	0.50
전남 곡성군	0.23	충남 예산군	0.30	전북 남원시	0.36		
전북 임실군	0.23	충남 금산군	0.30	전북 정읍시	0.37		
전남 진도군	0.24	전북 김제시	0.30	경남 밀양시	0.37		

주: 2017.3월말 기준치(0.5) 미만 기초지자체 85개

자료: 통계청 통계로 자체 시산

다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망*

* H-P(1962), Smith et al(2001) 방법론을 기초로 2010년 및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구별 장래인구 추계 후 소멸위험지수 산출. 단 세종시의 경우 2010년 인구총조사 미비로 장래인구추계(2017)를 활용. 상세한 사항은 <참고 2> 「시·군·구별 장래 인구추계 방법」 참조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단계(0.5 미만) 지역은 2020년 94개에서 2030년 185개(81.1%)로 빠르게 증가한 후 2040년에는 217개로 전체의 95.2%에 달할 전망*

* 2020년 94개 → 2025년 130개 → 2030년 185개 → 2035년 210개 → 2040년 217개

○ 수도권은 2020년 6개에서 2030년 46개(69.7%)로 급속히 증가한 후 2040년에는 63개(95.5%)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광역시(인천 제외)는 2020년 5개에서 2040년 37개(94.9%)로, 도 지역(경기 제외)은 각각 83개(67.5%)에서 117개(95.1%)로 증가할 전망

■ 대구, 전북, 제주는 타 지역보다 빠른 2030년에 시·군·구 전체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전망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역¹⁾ 전망

		2020	'25	'30	'35	'40
서울	(25)	0	3	17	23	24
인천	(10)	3	4	7	9	10
경기	(31)	3	8	22	29	29
수도권	(66)	6	15	46	61	63
부산	(16)	4	13	14	14	14
대구	(8)	1	3	8	8	8
광주	(5)	0	2	4	4	5
대전	(5)	0	2	3	4	5
울산	(5)	0	0	2	4	5
광역시	(39)	5	20	31	34	37
강원	(18)	13	14	16	17	17
충북	(11)	5	8	9	10	10
충남	(15)	10	10	12	14	14
전북	(14)	10	13	14	14	14
전남	(22)	16	18	18	18	20
경북	(23)	17	19	22	23	23
경남	(18)	12	13	16	17	17
제주 ²⁾	(1)	0	0	1	1	1
세종 ²⁾	(1)	0	0	0	1	1
도	(123)	83	95	108	115	117
합계	(228)	94	130	185	210	217

주: 1) 228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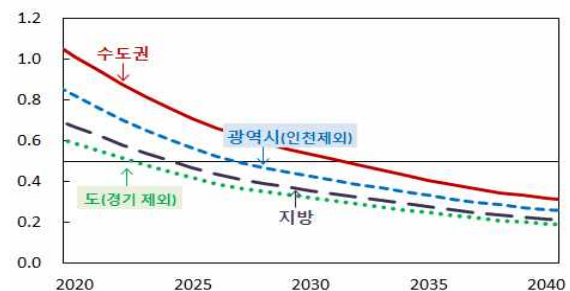
2)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시산

3) ()내는 시·도별 기초지자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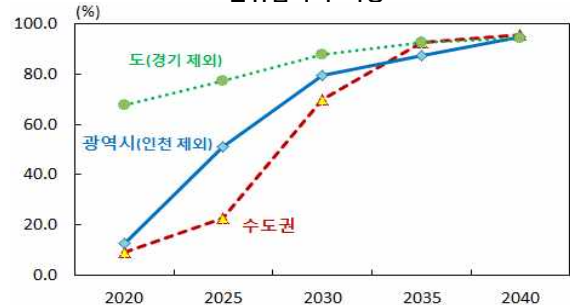
자료: 시·군·구는 인구총조사(2010, 2015) 결과를 활용하여 자체 시산, 시·도는 장래인구추계(2017) 적용

수도권·광역시·도 소멸위험지수 및 지역 비중 전망

<지방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지역 비중>



<참고 2>

시·군·구별 장래 인구추계 방법

□ Hamilton and Perry(1962)와 Smith et al.(2001)에 의한 방법을 이용

○ 두 시점의 인구 비교를 기초로 연령집단의 인구변화비율을 이용해 장래 인구 추계

○ 다만 인구변화비율은 사망 및 인구이동의 결과를 포괄

■ ${}_nP_{x+y, l}$: 최근의 센서스(l)에서 집계된 (x+y)부터 (x+y+n) 연령대 인구수

■ ${}_nP_{x, b}$: 두 번째로 가까운 센서스(b)로부터 집계된 x에서 (x+n) 연령대 인구수

■ y : 두 센서스간 연도 차이

■ 연령대별 인구변화비율 : ${}_nCCR_n = {}_nP_{x+y, l} / {}_nP_{x, b}$

■ 연령대별 인구변화비율을 이용한 장래 인구에 대한 예측은 아래와 같음

$${}_nP_{x+z, t} = {}_nCCR_x \times {}_nP_{x, l} \quad (z \text{는 } l \text{과 } t \text{ 사이의 기간})$$

■ 0~4세 연령대 인구수는 성별을 구분하여 산산(Smith et al., 2001)

$${}_5FP_{0, t} = \frac{{}_5FP_{0, l}}{{}_{49}FP_{15, l}} \times {}_{49}FP_{15, t}, \quad {}_5MP_{0, t} = \frac{{}_5MP_{0, l}}{{}_{49}FP_{15, l}} \times {}_{49}FP_{15,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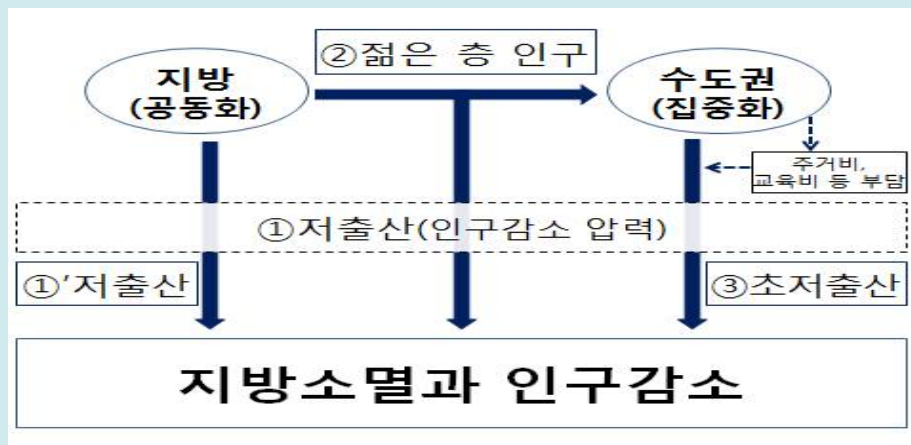
(FP : 여성 인구수, MP : 남성 인구수)

Ⅲ.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의 주요원인

◆ 저출산,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의 초저출산 등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를 동시에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

- 저출산은 수도권, 지방 공통 인구감소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초래
- 젊은 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① 지역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을 야기하는 한편 ②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거 및 교육비 부담 증가로 수도권의 출산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메커니즘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를 동시에 초래하는 ① 저출산, ②젊은 층의 수도권집중, ③수도권의 초저출산 등의 현황 및 요인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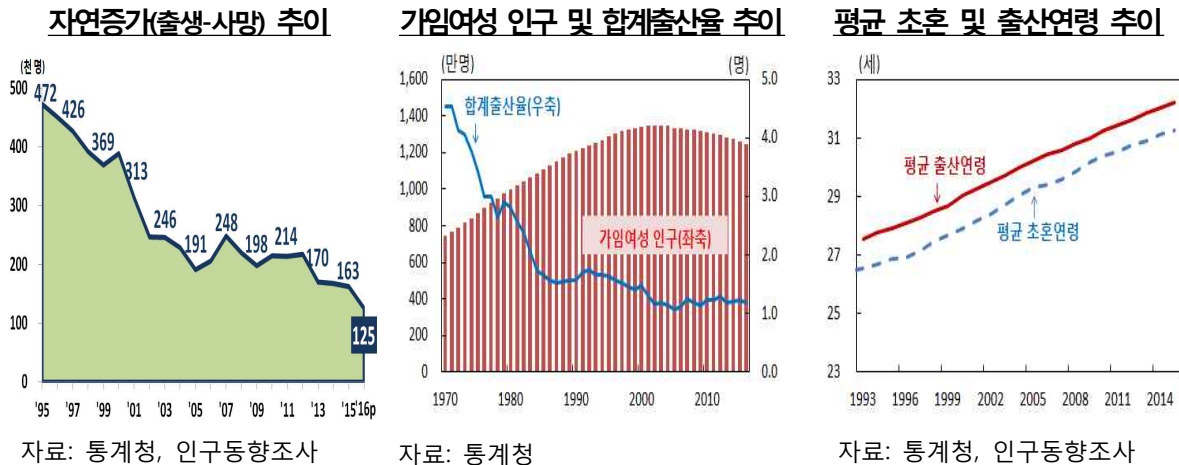
1

저출산

□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증가가 크게 감소(1995년 47.2만명 → 2016년 12.5만명)

- 2016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2.1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OECD평균(2013년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등 **세계 최저 수준**

* 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여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대체출산율은 2.1명 수준



- 저출산은 **청년층이 결혼 및 자녀관 변화, 고용불안 등으로 결혼에 소극적**이고 **기혼층이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부담으로 희망 아이수에 비해 적게** 출산하는 데 주로 기인

- 결혼율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미혼 청년층(20~35세)이 결혼에 소극적인 이유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사회적 요인(56.4%)**과 더불어 **경제적 요인(24.2%)**이 주 요인으로 지적

* 결혼율(1천명당) : 1970년 9.2 → 1995년 8.7 → 2014년 6.0 → 2016년 5.5

- 한편 실증분석 결과*,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임시직 비율, 주택가격종합지수, 실업률** 등으로 나타남

* 결혼율(15~39세 1천명당)은 임시직 비율 1%p 상승시 0.23~0.40건, 실업률 1%p 상승시 0.18~0.42건 각각 감소하고 주택가격도 결혼비용 상승을 통해 결혼에 부정적 영향(「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한국은행, 2010.12))

- 또한 **기혼층의 출산율 갭(희망 출산율-실제 출산율)**은 **1.04**로 주요국 및 OECD평균(0.68)을 크게 상회

- 기혼층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76.0%) 등으로 **희망 아이수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웨덴(3.2%), 프랑스(18.1%), 미국(32.1%), 일본(41.2%)에 비해서도 뚜렷하게 높은 수준

청년 층(20~35세) 결혼기피 원인

	전체	남	여
사회적요인	56.4	42.5	64.1
(결혼할 생각이 없음)	22.6	18.2	25.0
(결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충실)	10.8	7.6	12.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음)	9.7	7.6	10.8
경제적요인	24.2	44.0	13.3
(저소득)	6.5	9.1	5.0
(결혼비용 부담)	10.2	18.2	5.8
(실업·고용불안정성)	7.0	15.2	2.5
기타	19.4	13.5	22.6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갭(Gap) 국제비교¹⁾

	희망출산율(A)	실제출산율(B)	갭(A-B)
한국	2.25	1.21	1.04
핀란드	2.58	1.83	0.75
덴마크	2.48	1.75	0.73
스웨덴	2.41	1.90	0.51
프랑스	2.33	2.00	0.33
독일	2.12	1.39	0.73
스페인	2.11	1.34	0.77
이탈리아	2.01	1.39	0.62
OECD 평균	2.27	1.59	0.68

주: 1) 한국 2015, 그 외 2011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희망 아이수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¹⁾

	경제적 부담	고령출산 기피	일과 육아 병행 불가
한국	76.0	33.3	25.6
일본	41.2	32.4	22.4
미국	32.1	12.5	1.8
프랑스	18.1	22.9	9.6
스웨덴	3.2	29.0	0.0

주: 상위 3개 요인(복수 응답), 2010년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2 젊은 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

1 현황

□ 지방 젊은 층(20~39세)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지속

- 지방 젊은 층의 순유출규모는 2000년 119.8만명에서 2015년 22.7만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6년 41.7만명으로 다시 확대
- 다만 총 인구에서는 최근 들어 은퇴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순유입으로 전환

* 1955~63년생(2014년 50~59세)으로 생산가능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은퇴연령인구(60세 이상)의 55.0%, 고령층(65세 이상)의 35.8%를 각각 차지할 전망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주: 통계청 통계로 자체 시산
자료: 통계청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순유출

		2000	2005	2010	2015	2016
20~30대	전체	119.8	99.9	47.9	22.7	41.7
	남	66.3	49.3	24.0	11.1	22.3
	여	53.4	50.6	23.9	11.7	19.4
총 인구	전체	150.3	128.8	31.0	-33.0	-0.9
	남	78.4	58.7	11.2	-22.2	-3.9
	여	71.9	70.1	19.8	-10.8	3.0

자료: 통계청

□ 지역별로 보면 지난 10년간(2007~16년) 지방 젊은 층(20~30대)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지역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울산, 강원, 충북 등 11개 지역

- 정부 행정 및 출연 기관이 이전한 세종, 수도권 규제로 기업입지가 증가한 충남, 관광서비스업 발달로 젊은 층의 고용이 증가한 제주 순유입
- 한편 권역별(2016년, 제주 제외)로는 수도권(20~30대, 전연령 각각 4.4만명, 0.8만명) 및 중부권(각각 0.7만명, 4.2만명)은 순유입이었으나, 호남권(각각 1.9만명, 1.5만명) 및 영남권(각각 3.2만명, 3.6만명)은 순유출

시·도별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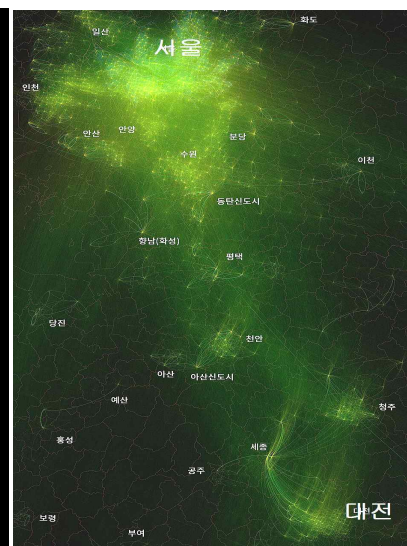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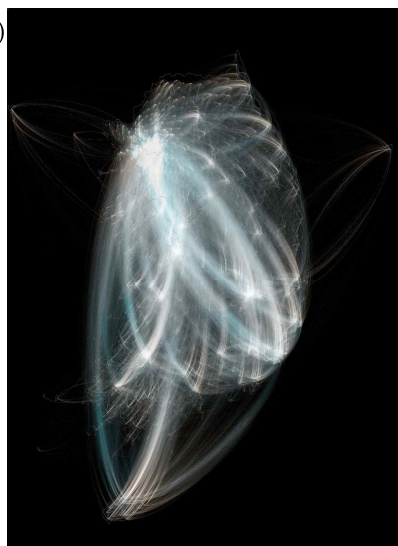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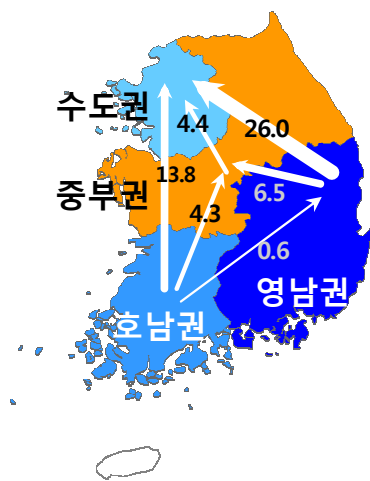
(천명)

	2007		2010		2015		2016		2007~2016	
	20~30대	총 인구	20~30대	총 인구	20~30대	총 인구	20~30대	총 인구	20~30대	총 인구
부산	12.3	17.5	8.4	11.0	4.5	4.2	6.3	7.6	73.7	90.2
대구	7.6	10.7	6.1	7.8	4.9	5.4	5.2	5.9	58.4	72.7
경북	10.0	12.7	7.1	6.7	4.3	1.1	6.5	3.5	66.8	54.0
경남	6.6	7.8	5.5	6.0	3.1	0.8	5.9	5.3	47.7	43.2
광주	5.7	8.6	3.0	2.7	3.4	3.4	3.9	4.2	35.9	39.7
대전	5.0	6.0	2.8	3.8	1.5	0.0	2.1	1.5	27.3	25.1
전북	8.4	9.3	4.3	1.9	3.6	-0.8	5.0	1.9	48.4	23.4
전남	8.1	10.6	4.5	2.7	2.7	-2.1	4.9	2.5	41.9	19.5
울산	1.7	2.6	1.9	2.6	0.8	0.7	2.2	2.9	12.8	15.1
강원	6.9	5.4	3.8	-1.2	1.5	-6.2	4.0	-3.2	35.7	-24.2
제주	2.1	2.2	0.4	-0.7	-2.7	-9.8	-2.6	-9.2	-6.0	-34.6
충청	2.3	-1.6	0.7	-3.8	0.5	-5.9	1.6	-4.9	11.7	-42.1
세종	-	-	-	-	-4.9	-13.5	-3.0	-7.7	-15.2	-43.1
충남	0.4	-8.8	-0.5	-8.4	-0.7	-10.1	-0.3	-11.1	-2.8	-89.6
합계	77.0	82.9	47.9	31.0	22.7	-33.0	41.7	-0.9	436.2	149.1

자료: 통계청

20~30대 권역간 순이동 국내 인구이동 데이터 시각화¹⁾ 서울대전 인구이동 데이터 시각화¹⁾

(천명)



주: 2016년, 제주(순유입 4.7) 제외
자료: 통계청

주: 1) 총 인구, 시계방향의 인구이동
자료: 김승범

주: 1) 총 인구, 시계방향의 인구이동
자료: 김승범

②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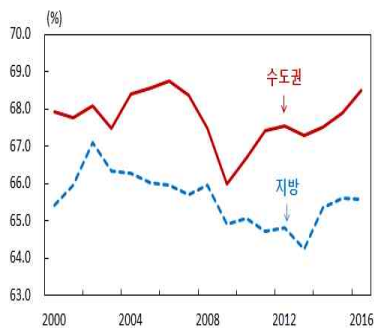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및 생활 여건 차이)

□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취업 및 임금, 대학진학, 문화 및 서비스 인프라 등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

○ **【취업 및 임금】** 수도권의 젊은 층 고용률(2016년)은 68.5%로 지방(65.6%)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청년 취업자의 54.3%(2015년)가 수도권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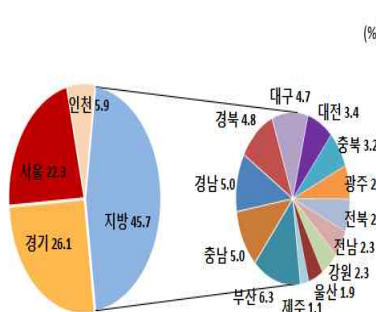
■ 젊은 층 임금도 수도권(월평균 254만원)이 지방(23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

**수도권 및 지방의 젊은 층¹⁾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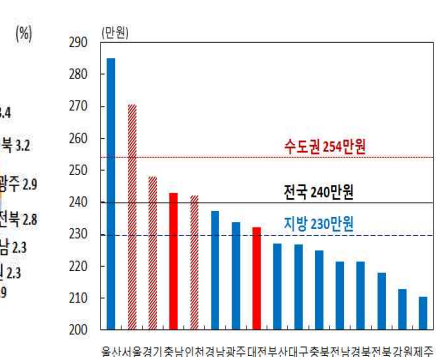
주: 1) 20~30대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로 자체 시산

**청년(15~29세)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



주: 1) 2015년 기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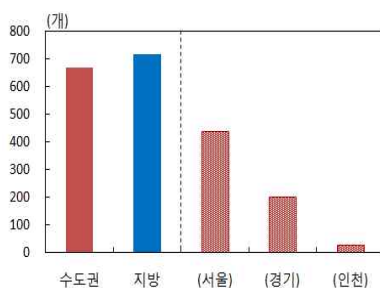
**수도권 및 지방의 젊은 층¹⁾
월평균 임금**



주: 1) 2015년 20~30대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2015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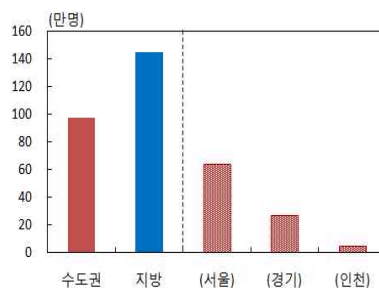
○ **【진학】** 수도권은 전체 대학교 및 대학원 수의 48.3%(2016년), 대학 및 대학원생 수의 40.2%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평가 30위권 내 대학도 다수(22개 대학) 소재

지역별 대학교 및 대학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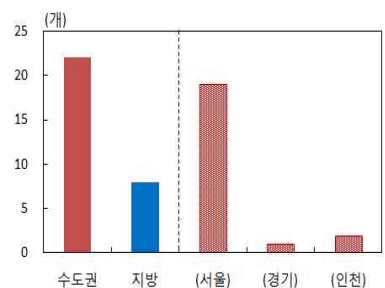
주: 1) 2016년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지역별 대학 및 대학원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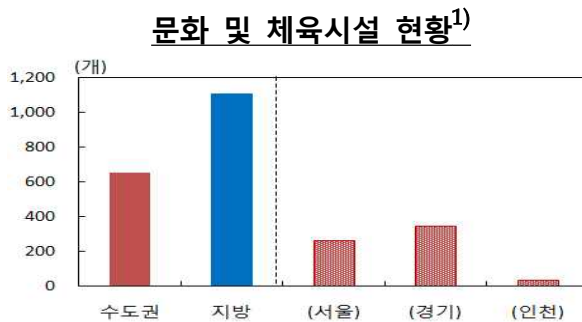
주: 1) 2016년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전국 대학평가 30위권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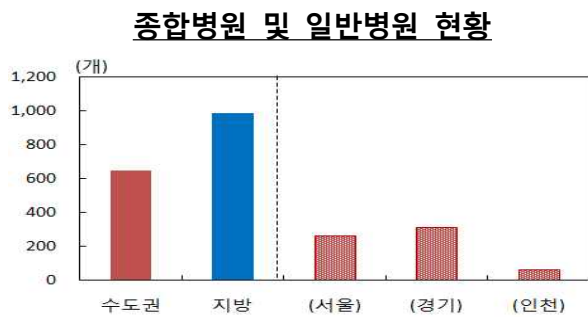


자료: 중앙일보 대학평가(2016)

- **【문화·의료 기반시설】** 수도권에는 전체 문화·체육 시설의 36.9%(체육관 35.3%, 박물관 37.2%, 미술관 43.1%)가 위치해 있으며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도 39.6%(각각 39.9%, 39.6%)가 집중



주: 1) 2013년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주: 1) 2013년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참고 3>

수도권 집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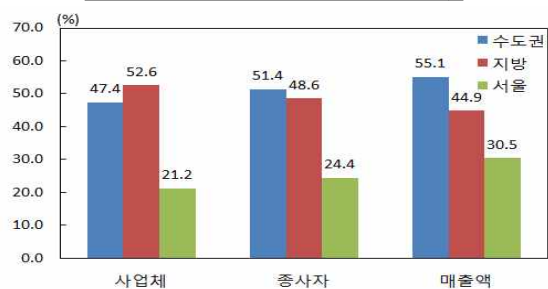
-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의 49.7%(15년 기준)가 모여 사는 가운데 GRDP의 49.4%(15년 기준)가 집중되어 있는 등 경제력 집중도도 매우 높은 상황
- 사업체수의 47.4%(15년 기준), 종사자의 51.4%, 매출액의 55.1%를 차지하는 등 국가 실물경제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
- 또한 100대 기업중 67개(16년 기준)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은행 예금 및 대출도 6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 집중률 추이

	80	90	00	05	10	15	16
면적	11.8	11.8	11.8	11.8	11.8	11.8	11.8
인구 ¹⁾	35.5	42.8	46.3	48.2	49.3	49.7	49.7
GRDP	-	47.5	48.4	48.9	48.8	49.4	..
사업체수	41.1 ³⁾	44.6 ⁴⁾	44.8	46.6	47.1	47.4 ⁵⁾	..
100대 기업 ²⁾	84.0	84.0	87.0	76.0	78.0	83.0	67.0
지역민총소득	-	-	51.4	53.9	54.9	53.8	..
은행예금	-	-	68.1	67.8	72.0	69.2	68.7
은행대출	-	-	65.2	66.7	70.1	65.3	64.9

주: 1) 추계인구 기준 2) 매출액 기준(본사소재지 기준)
3) 81년 기준 4) 91년 기준 5) 2015년 잠정
자료: 국토해양부, 통계청, 대한상공회의소, Kis-Value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¹⁾



주: 1) 2015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15년 경제총조사」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요인 실증분석 결과)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요인을 양질의 일자리비중 등 민간부문 요인과 문화기반시설수 등 공공부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인구이동 순편의 모형에 의거 계량 분석*해본 결과, 민간 및 공공 부문 요인 모두 인구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모형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 4>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모형」 참조

- **민간부문** 요인의 경우 총 인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비중이 유인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20~30대에서는 임금, 40~50대에서는 고용률이 각각 인구 이동에 크게 영향
- **공공부문** 요인의 경우 연령대와 상관없이 도로포장률, 문화기반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대학생수 등 삶의 질에 대한 제반 여건 등이 각각 인구 이동에 유의한 영향
 - 주거비용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전세가격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 인구에서 인구를 밀어내는 효과(push)가 큰 반면 도로포장률, 문화기반시설 등은 유인효과(pull)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 여건이 총 인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고용 여건의 경우에는 20~30대는 고용가능성(고용률)보다 생애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기대소득(임금, 양질의 일자리 비중), 40~50대는 기대소득보다 고용가능성이 거주지 선택의 중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지방·수도권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결과

		총 인구	20~30대	40~50대
고 용 여 건	고용률	0.017 (0.17)	-0.586*** (0.15)	0.438*** (0.12)
	임금	-0.063 (0.11)	0.206* (0.14)	-0.240*** (0.08)
	양질의 일자리비중	0.142*** (0.48)	0.226*** (0.06)	0.05 (0.04)
삶 의 질 여 건	전세가격	-0.335*** (0.04)	-0.391*** (0.06)	-0.257*** (0.03)
	도로포장률	0.346*** (0.86)	0.217** (0.11)	0.311*** (0.06)
	문화기반시설수	0.055*** (0.01)	0.062*** (0.01)	0.045*** (0.01)
	사회복지시설수	-0.077*** (0.01)	-0.098*** (0.01)	-0.057*** (0.01)
	의료기관병상수	0.123*** (0.02)	0.117*** (0.03)	0.081*** (0.02)
	대학생수	0.127*** (0.02)	0.138*** (0.03)	0.068*** (0.02)
하우스만(Chi2)		175.69	183.84	87.23
Prob> Chi2		0.00	0.00	0.00
표본수		936	936	936
R2		0.721	0.840	0.785

주: 1) 하우스만 검정시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면 확률효과 모형을, 기각하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여 기술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5%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자체분석

<참고 4>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모형

□ 김현아(2008), 이찬영(2016) 등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인구이동 순편익 모형에 따르면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Todaro(1981)의 민간부문(금전적) 요인과 Tiebout(1956)의 공공부문(공공재 혜택) 요인으로 구분

- 민간부문 요인은 취업가능성, 기대소득 등 고용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공공 부문 요인은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내지 제도적 기반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과 관련
- 본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의 변수로는 각 지역의 고용률, 임금수준,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사용하며, 공공부문의 변수로는 전세 가격지수, 도로포장률, 문화서비스혜택, 사회복지혜택, 의료시설의 사용 용이성, 교육여건을 이용

$$NB_i = B(e_i, w_i, d_i, r_i, c_i, sw_i, m_i, sc_i) - C(h_i) \quad (1)$$

NB: i 지역 거주자가 이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편익, e : 고용률, w : 임금수준, d : 양질의 일자리 비중, r : 공공부문의 도로포장률, c : 문화서비스혜택, sw : 사회복지혜택, m : 의료시설의 사용 용이성, sc : 교육여건, h : 전세가격

$$NB_{ij} = NB_i - NB_j = f(e_i, e_j, w_i, w_j, d_i, d_j, r_i, r_j, c_i, c_j, sw_i, sw_j, m_i, m_j, sc_i, sc_j, h_i, h_j) \quad (2)$$

지역 i 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순편익과 타 지역 j 로 옮겼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예상순편익을 비교하여 예상 순편익이 큰 곳을 거주지로 선택

$$M_{ij}^t = \beta_0^t + \beta_1 \frac{e_i^{t-1}}{e_j^{t-1}} + \beta_2 \frac{w_i^{t-1}}{w_j^{t-1}} + \beta_3 \frac{d_i^{t-1}}{d_j^{t-1}} + \beta_4 \frac{r_i^{t-1}}{r_j^{t-1}} + \beta_5 \frac{c_i^{t-1}}{c_j^{t-1}} + \beta_6 \frac{sw_i^{t-1}}{sw_j^{t-1}} + \beta_7 \frac{m_i^{t-1}}{m_j^{t-1}} + \beta_8 \frac{sc_i^{t-1}}{sc_j^{t-1}} + \beta_9 \frac{h_i^{t-1}}{h_j^{t-1}} + \epsilon_{i,j}^t \quad (3)$$

종속변수는 t 년도의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를 i 지역의 전년도 인구로 나눈 인구순이동률이며 (+) 부호는 i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구의 순유입, (-)는 인구의 순유출을 의미

$$\epsilon_{i,j}^t = \mu_i + \mu_t + e_{i,j}^t \quad (4)$$

식(3)의 오차항은 식(4)와 같이 관찰되지 않는 그룹의 특성(μ_i)과 관찰되지 않는 시간 특성(μ_t)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는 그룹과 시간이 동시에 고려된 이원오차성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음

최종적으로는 μ_i 와 μ_t 를 추정해야할 모수로 보느냐 아니면 확률변수로 보느냐에 따라 각각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 효과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고, Hausman 테스트를 적용하여 보다 바람직한 모형을 선택

설명변수의 자료¹⁾ 출처 및 변수 생성방법

설명변수	자료 출처
고용률	통계청의 연령별 고용률
임금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행정구역별 5인 이상 사업체 규모의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양질의 일자리 비중	전체취업자 대비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중
도로포장률,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인구 천 명당 대학교 재학생수	통계청의 e-지방지표
전세가격	국민은행 지역별 전세종합가격지수

주: 1) 2004~15년 16개 시·도 기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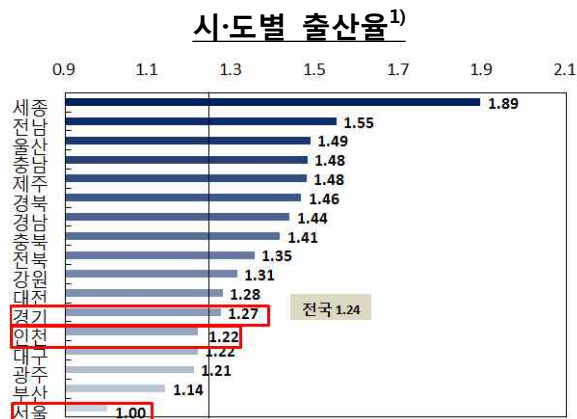
수도권의 초저출산

□ 서울 등 수도권 출산율이 지방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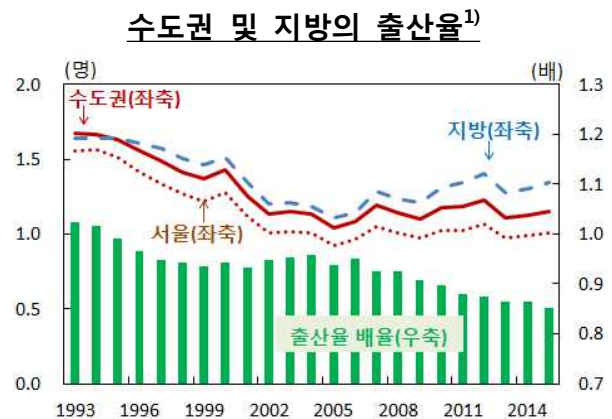
○ 2015년 서울 출산율이 1.00(2016년 0.94)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수도권 전체로도 1.15로 지방평균(1.35)을 상당 폭 하회

■ 시·도별로는 세종(1.89)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저조

○ 수도권과 지방의 출산율 배율(수도권/지방)은 1995년 최초로 기준치(1.0)를 하회한 이후 2015년에는 0.85배까지 하락



주: 1) 2015년 합계출산율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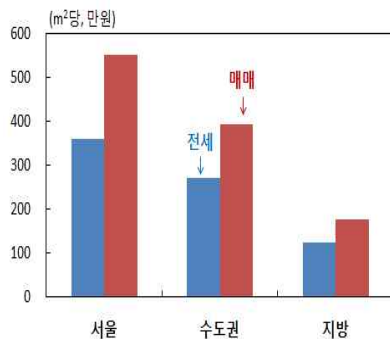
주: 1) 출산율 배율은 수도권 / 지방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 수도권 초저출산은 서울 등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결혼 및 출산 기피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의 1m²당 평균 전세 및 매매 가격은 각각 359만원, 552만원으로 지방대비 2.9배, 3.1배에 달하며 사교육비도 월평균 35만원으로 광역시(25만원)나 도(25만원) 평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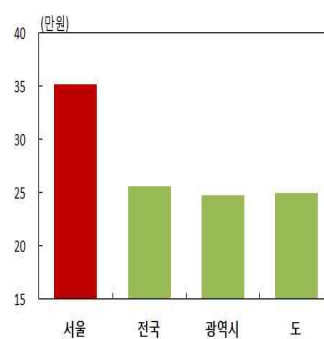
○ 서울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국평균대비 남·녀 각각 0.9세, 0.4세, 출산 연령도 0.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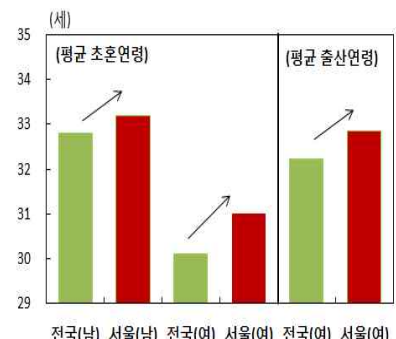
주: 2016년말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월평균 사교육비



주: 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



주: 2015년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 서울의 초저출산에 대한 원인 분석* 관련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실업,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저출산 현황분석: 고용률과 주택구매력을 중심으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 서울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고용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35~39세는 주택 구매력이 출산 결정요인으로 작용

연령별 출산율 상관관계

	순 위	30 ~ 34	35 ~ 39
(+) 관계	1	고용률	연립주택 구매력
	2	주택 구매력	아파트 구매력
	3	아파트 구매력	고용률
(-) 관계	1	실업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35~39세 여성 유출 수
	3	30~34세 여성 유출 수	실업률

자료: 「서울시 저출산 현황분석: 고용률과 주택구매력을 중심으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 ⇒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이로 인한 높은 주거비 부담 등 결혼 및 보육 환경 악화로 지방에 비해 출산율이 더 낮게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

IV. 대전·충남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 점검

◆ 대전·충남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대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권역간 격차**(충남 북부 및 남부, 대전 원도심 및 신도심)가 상당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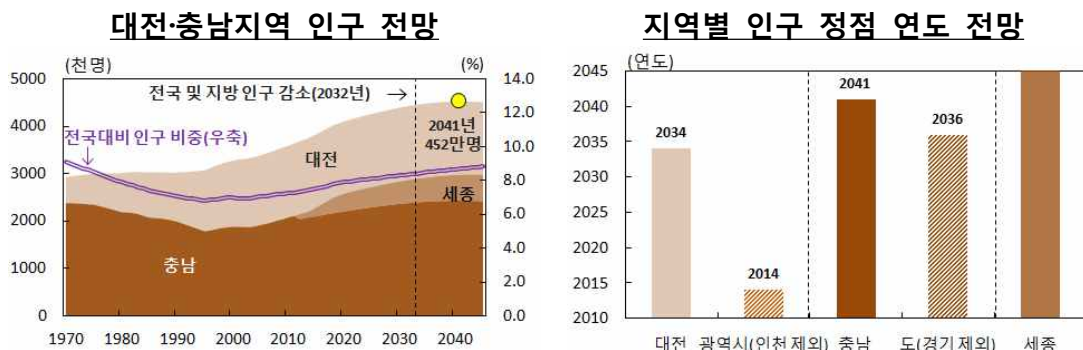
- 젊은 층이 교육 및 취업을 위해 단계적이며 순차적으로 이동(충남 남부 → 대전 → 수도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가운데 특히 **대전지역 젊은 층**은 취업기회가 많은 수도권 등으로 **지속 유출**

1

인구 현황 및 전망

□ 대전·충남(세종 포함)지역의 인구는 2016년 389만명에서 전국 및 지방(수도권 제외) 인구 정점(2031년)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2041년에 4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로 전환될 전망

- 전국대비 비중도 동 기간 7.6%에서 8.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전은 2034년 156만명, 충남은 2041년 243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나 세종은 지속적 인구증가로 2045년 56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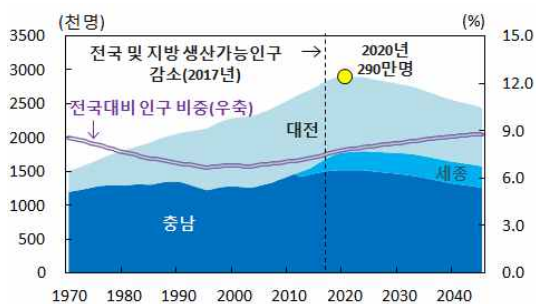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주: 세종은 예측기간(2045년)내에는 인구 증가 예상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280만명에서 전국 및 지방(수도권 제외) 인구 정점(2016년)보다 다소 낮은 **2020년에 29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로 전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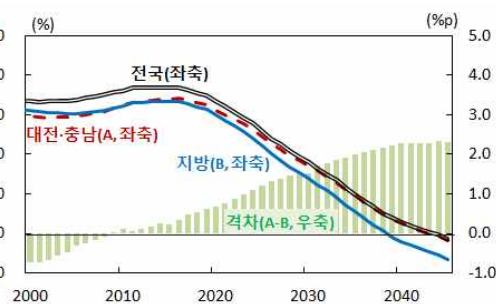
- 전국대비 비중도 동 기간 7.5%에서 7.8%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2016년)은 72.1%로 지방 평균(71.7%)보다는 다소 높으나 전국평균(73.4%)보다는 낮은 수준

대전·충남지역 생산가능인구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

2

대전·충남지역 지방소멸 리스크 현황 및 전망

1 현황 및 전망

□ 대전·충남지역 전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7.3월말 현재 0.90으로 지방소멸 주의단계에 해당되나 지방평균(0.78)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전국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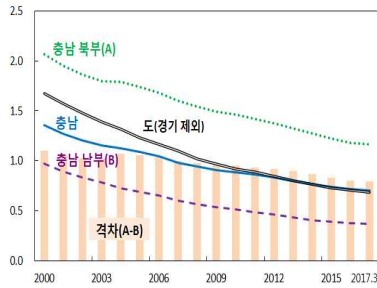
- 다만 지역내 권역별 불균형 심화로 충남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전은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양군(0.22), 서천군(0.23), 부여군(0.25), 예산군(0.30), 금산군(0.30), 태안군(0.30), 보령시(0.41), 논산시(0.41), 공주시(0.44), 홍성군(0.49), 계룡시(1.30) 등 11개 지역이며 이 중 10개 지역이 소멸위험단계(0.5 미만)

** 중구(0.82), 동구(0.81) 대덕구(1.03) 등 3개 지역이며 이 중 2개 지역이 소멸주의단계(1.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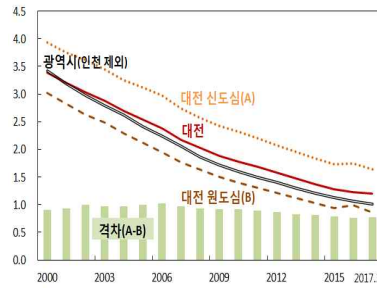
- 충남 북부 및 남부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각각 1.16, 0.37, 대전 신도심 및 원도심은 1.63, 0.86을 기록

충남 권역별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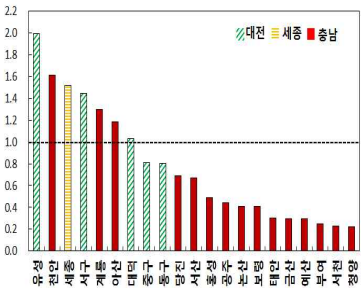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로 자체 시산

대전 권역별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로 자체 시산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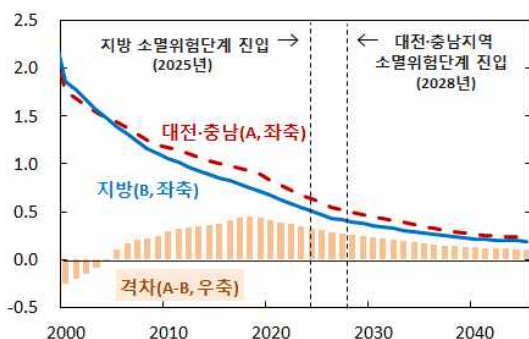
주: 1) 2017.3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로 자체 시산

□ 향후 대전·충남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8년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락속도는 타 지역보다는 완만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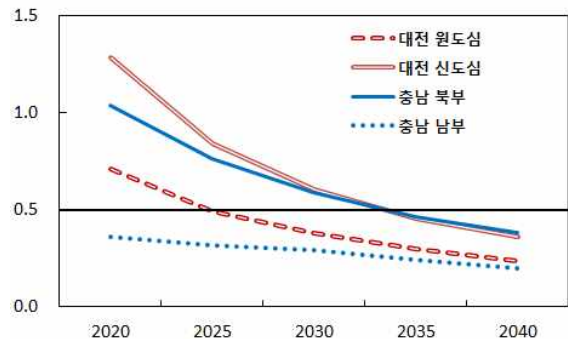
○ 그러나 권역간 불균형 심화로 충남 남부지역(2011년)과 대전 원도심지역(2025년)은 지역 전체(2028년)에 비해 빠르게 소멸위험단계에 이를 전망

대전·충남지역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로 자체 시산

대전·충남지역 권역별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로 자체 시산

2 지방소멸 리스크 주요원인

(출산율 저하)

□ 대전·충남지역도 전국과 유사하게 고용 불안정, 양육부담 증가, 결혼 및 자녀관 변화 등으로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하락 추세

○ 전체 여성인구중 젊은 여성(20~39세)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미혼 여성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 20~39세 미혼여성 비율(2010, 2015): 전국 47.8% → 55.2%, 대전·충남 44.8% → 51.5%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

		(세)				
		'00(A)	'05	'10	'15(B)	(B-A)
초혼연령	대전	26.3	27.7	29.0	29.8	3.5
	충남	25.4	26.8	28.2	29.2	3.7
	전국	26.5	27.7	28.9	30.0	3.5
출산연령	대전	29.0	30.1	31.2	32.1	3.1
	충남	28.3	29.5	30.4	31.4	3.1
	전국	29.0	30.2	31.3	32.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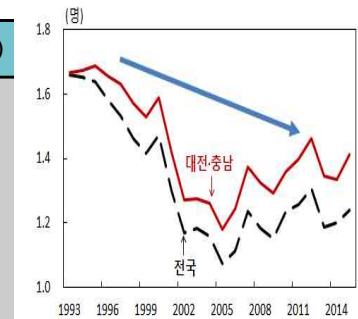
주: 여성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젊은 여성 비중¹⁾

		(% , %p)				
		'00(A)	'05	'10	'15(B)	'16(B)
대전	대전	37.5	35.2	31.1	28.2	27.9
	충남	30.8	29.2	26.8	25.2	25.0
	전국	35.7	33.3	29.8	27.1	26.8
		(B-A)				
		-9.6				
		-5.7				
		-8.9				

주: 1) 전체 여성인구중 비중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대전·충남지역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젊은 층 인구의 단계적 수도권 유출)

- 대전·충남지역 젊은 층은 교육 및 취업을 위해 단계적이며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가운데 특히 대전지역 젊은 층은 수도권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출

* 충남 남부지역 젊은 층은 취약한 교육여건으로 대전지역으로 이주하고 대전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

- 충남지역내 기업유치가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북부권은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인 남부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나 기반시설이 양호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유출 지속

충남 젊은 층(20~30대) 순이동자수¹⁾ 추이



주: 1) 시·도간 인구순유입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충남 시·군별 젊은 층(20~30대) 순이동자수¹⁾ 추이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북 부		8,399	8,737	7,376	4,944	6,282
천안시		4,267	3,675	2,729	2,641	4,691
아산시		1,897	2,300	2,525	542	1,044
당진시		1,824	1,906	1,434	830	543
서산시		411	856	688	931	4
남 부		-5,055	-4,597	-4,818	-2,941	-3,018
홍성군		-81	63	464	649	1,814
계룡시		-569	-195	-157	305	93
청양군		-209	-159	-212	-38	3
태안군		-265	-249	-199	107	-93
금산군		-264	-393	-385	-291	-373
서천군		-395	-359	-440	-439	-431
보령시		-632	-532	-509	-12	-610
부여군		-486	-532	-564	-479	-555
예산군		-567	-678	-387	-818	-1,099
논산시		-619	-758	-1,001	-649	-891
공주시		-968	-805	-1,428	-1,276	-876
		2012~16				
북 부		35,738				
천안시		18,003				
아산시		8,308				
당진시		6,537				
서산시		2,890				
남 부		-20,429				
홍성군		2,909				
계룡시		-523				
청양군		-615				
태안군		-699				
금산군		-1,706				
서천군		-2,064				
보령시		-2,295				
부여군		-2,616				
예산군		-3,549				
논산시		-3,918				
공주시		-5,353				

주: 1) 시·군·구간 인구순유입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 대전지역은 젊은 층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출 지역은 주로 수도권 및 세종시

- 특히 지역별 인구유출 심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OUTPL* 지표로 보더라도 대전의 젊은 층 인구유출 정도는 다른 광역시 등에 비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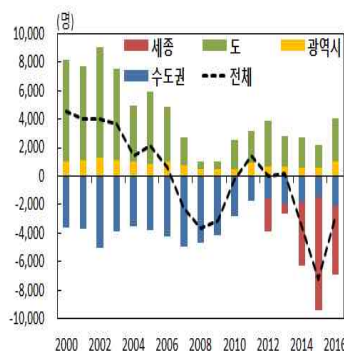
* 미국 상무성(Feser and Sweeney 1999년)이 지역별 인구유출율에 지역별 인구증감률을 곱하여 산출한 지표(Out-migration/Population Loss Indicator)로 동 지표가 낮을 수록 인구유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해석

지역별 젊은 층(20~30대) 순인구유출률

	2014	2015	2016	2014~16
광주	0.76 (0.2)	1.52 (0.63)	1.16 (0.54)	1.15 (0.46)
대구	1.33 (0.63)	1.03 (0.52)	0.80 (0.38)	1.05 (0.51)
대전	0.80 (0.58)	1.64 (1.36)	0.65 (0.71)	1.03 (0.88)
부산	0.94 (0.43)	0.81 (0.39)	1.05 (0.62)	0.93 (0.48)
울산	-0.73 (-0.24)	-0.29 (0.01)	0.93 (0.65)	-0.03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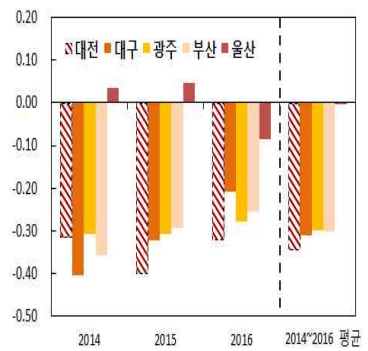
주: 1) ()내는 총 인구
자료: 통계청, 인구가동통계, 주민등록연앙 인구

대전 젊은 층(20~30대) 전출지별 순이동자수¹⁾ 추이



주: 1) 인구유입 - 인구유출
2)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자료: 통계청, 인구가동통계

지역별 OUTPL¹⁾ 지표



주: 인구유출율×인구증감률
자료: 통계청, 인구가동통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시산

- 대전지역 젊은 층의 수도권 및 세종으로의 순유출은 이들 지역에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대전지역 대졸인력의 지역별 취업 현황(2014년)을 보면 대졸자의 60.4%가 대전 외의 타 지역(수도권 24.8%)으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52.1%)을 상회하며 광역시중 가장 높은 수준
- 지역별 구인배율(신규구인인원수/신규구직자수, 2015년)도 지역 일자리 부족 등으로 0.45배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0.59배)을 하회한 데다 광역시중 가장 낮은 수준

대졸인력의 지역별 취업 현황¹⁾

		취업 지역 (명, %)					
		동일 지역		타 지역		수도권	
학 소 재 지	대전	233	(39.6)	355	(60.4)	146	(24.8)
	대구	301	(49.5)	307	(50.5)	87	(14.3)
	부산	529	(53.6)	458	(46.4)	112	(11.3)
	광주	267	(57.4)	198	(42.6)	71	(15.3)
	울산	74	(66.1)	38	(33.9)	8	(7.1)
전국		6,362	(47.9)	6,914	(52.1)	4,443	(33.5)

주: 1) 2014년 기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지역별 구인배율¹⁾



주: 1) 신규구인인원수/신규구직자수, 2015년 기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통계연보」

V. 정책적 시사점

- ◆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리스크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인구문제와 연관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출산율 제고와 수도권집중 방지 등 **투 트랙**으로 추진할 필요
- ◆ 대전·충남지역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정책 추진, 지역내 권역간 불균형**(충남 북부·남부, 대전 원·신도시심) **해소** 등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1 국가 차원의 정책대응

- ◇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리스크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인구문제와 연관성이 크므로, 출산율 제고와 수도권 집중 방지 대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할 필요

① 출산율 제고

- 결혼을 희망하는 젊은 층에 대한 고용정책 등과 기혼 층의 희망출산을 지원하는 출산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
 - 결혼 및 주택 관련 자금지원,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조기 결혼을 유도
 - 한편 기혼 층을 대상으로 육아·교육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금전보조 및 보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희망출산 지원

* 일본은 결혼·육아·교육 목적 증여에 비과세,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기관 사용 우대 및 비용 무상화(「소자화(少子化) 사회 대책」, '15.3월) 등 세제혜택 및 금전보조를, 스웨덴 및 프랑스는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

- 또한 소득불균형 심화는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차원의 개선노력 강구 필요

*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정책요구¹⁾

		결혼 및 주택 자금대여 및 보조	고용대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맞벌이가 가능하도록 직장환경 조성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지원
한국	2010	55.3	47.5	25.1	27.4
	2005	51.2	47.0	30.7	26.5
일본	2010	21.3	48.8	45.0	31.5
	2005	36.5	33.8	40.5	34.1
미국	2010	14.8	38.3	19.7	39.7
	2005	16.9	25.6	22.3	43.0
프랑스	2010	13.0	34.3	39.0	33.1
	2005	9.6	28.9	29.6	28.2
스웨덴	2010	7.6	38.9	17.1	32.7
	2005	5.7	36.3	19.6	26.7

주: 복수응답 상위 4개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주요국 기혼자의 출산에 대한 정책요구¹⁾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등 보육서비스 확대	어린이 범죄방지 등 지역치안 확보	고용 안정 등
한국	2010	72.1	57.2	34.3	33.8
	2005	62.5	55.2	37.6	46.9
일본	2010	59.4	41.4	51.0	54.9
	2005	35.8	29.8	29.6	45.1
미국	2010	32.8	49.0	66.6	52.1
	2005				
프랑스	2010				
	2005				
스웨덴	2010				
	2005				

주: 복수응답 상위 4개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②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방지

- 지방의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거나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령대별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감안한 정책 추진

- 청년층의 인구이동 관련 정책은 일자리의 질에, 중장년층은 일자리의 양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정책*을 추진

* 20~30대의 경우에는 임금 및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이주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40~50대는 고용률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제반 요인(전세가격, 문화서비스 혜택, 의료서비스 혜택, 교육여건, 도로포장률 등)도 인구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개선

□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

* <참고 5> 「정부의 수도권 규제 및 완화 정책」 참조

- 아울러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거점도시* 육성도 검토해 볼 필요

* 일본은 지역생존을 위한 모델로 산업유치형, 베드타운형, 학원도시형, 콤팩트시티형#, 공공재 주도형, 산업개발형의 6개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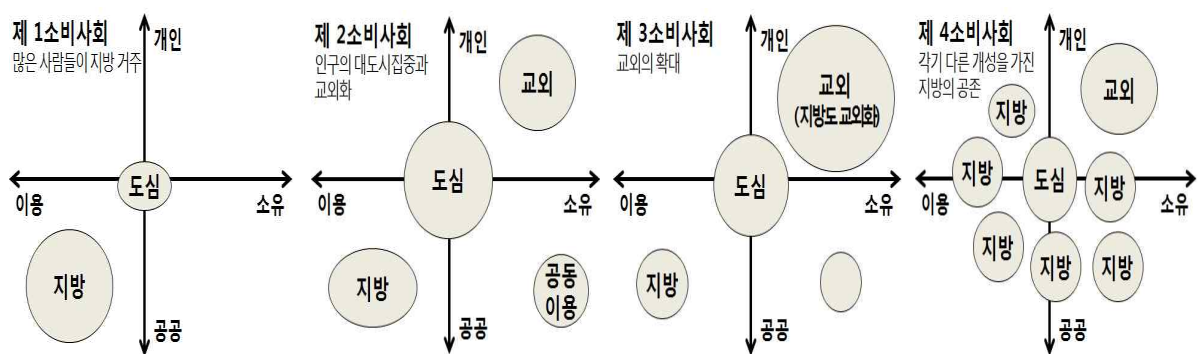
장래인구감소를 예측하여 기존 분산된 도시기능을 중심지에 집약하여 지역 경제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도시 개념

- 여성이 결혼 및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노마드워크(Nomad work)* 및 제4소비사회** 도래에 대응한 지역구조 변화 모색

* 사무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도서관 등 선호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방식

** 물건이나 장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시대로 카셰어링이나 셰어하우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

소비사회와 지역의 관계



자료: 三浦展「第四の消費」

2

지역 차원의 정책대응

- ◇ 대전·충남지역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정책 추진, 지역내 권역간 불균형(충남 북부·남부, 대전 원·신도심) 완화 등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1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정책 추진

- 국가 차원의 저출산정책과 더불어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필요
- 일본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공동사업,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
 -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이 많은 충남 남부지역은 방과후 과정, 맞벌이 부부가 많은 대전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을 확충하고 기혼층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 또한 기존 기혼자 중심의 출산정책에서 미혼자의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대책도 병행할 필요
 - 지역특성에 맞춰 국제결혼, 직업·연령별 남·녀 만남의 場 등을 각각 지원하고 청년층 지역인재 채용과 기업유치전략을 연계(지역 청년고용 실적에 따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차별화)

일본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유형

분야		'지자체 + 중앙정부 보조' 사업	지자체 단독실시사업
지역육아지원		▶ 지역육아지원센터 (상담원 증원 등)	▶ 육아광장
보육서비스·유아교육	보육	▶ 보육원 보육사의 증원 ▶ 보육료의 경감	▶ 인가외 보육원 시설지원 ▶ 유치원-보육원 일체화 시설 설치
	육아교육	▶ 유치원교원의 추가 배치 ▶ 유치원 수업료 보조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		▶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에 추가적으로 보조	▶ 전 아동대상
편부모가정지원			▶ 독자 지원
각종수당 지급			▶ 독자 수당 ▶ 축하금 지급
모자보건		▶ 영유아검진(실시회수 증가)	
의료		▶ 불임치료	▶ 영유아의료비 지원

자료: 「일본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시사점」(한국은행 강원본부, 2014년)

② 지역내 권역간 불균형 완화를 통한 인구유출 최소화

□ 지역내 권역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입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청년층이 교육 및 취업을 위해 지역 내·외에서 단계적이며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지역내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
- 구체적으로는 ① 산·학·관 연계를 통한 지역 주력 및 성장 산업에 특화된 대학교육 강화, ② 지역유형별(대도시, 지방핵심도시, 지방중소도시, 산간지역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한편 인구감소에 대응한 Compact City* 건설로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및 질적 차별화를 도모하고 지역적 특성과 주택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한 지방중심의 주택정책을 수립

* 지역 중심부에 행정,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집중시킴으로써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지역은 녹지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도시

- 의료, 복지, 간호 등 공공서비스의 경우 공급의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중심도시를 핵으로 하여 인근 지역까지 광역화한 공급체제를 구축
-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주택정책을 중앙정부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할 필요

* 충남 북부권은 유동인구 증가와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므로 도심지 중심 도시형생활주택, 남부권은 고령화에 따른 1인가구 증가를 반영하여 기존 주택 개보수시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주로 추진

<참고 5>

정부의 수도권 규제 및 규제완화 정책

(주요 규제정책)

- 정부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교통, 주택,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
- 수도권 규제의 주요 내용은 정비권역 및 행위제한, 공장총량제,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등

주요 수도권 규제정책

규제정책	제정일자	규제내용
▪ 수도권정비계획	82.1월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별적 규제 * 이전축진구역, 개발유보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제한정비권역
▪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0.1월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신설 제한
▪ 수도권공장총량제	94.1월	매년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증축 면적의 총량을 설정
▪ 수도권과밀부담금	94.1월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 신·증축시 표준 건축비의 5~10% 부과
▪ 수도권재개발이익환수제	05.3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

(최근의 규제완화 정책)

-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수도권규제가 완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제완화 주요 내용
▪ 08. 7월	“5+2 광역경제권 정책” 발표: 수도권도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인정하여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 마련
▪ 08.10월	“국토이용 효율화방안” 발표: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및 서울에 첨단 산업단지 개발 허용
▪ 09. 3월	수도권의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 09. 5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20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141km ² 해제
▪ 10. 1월	세종시 수정안 발표
▪ 11.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 관리”로 변경
▪ 11. 1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 발표 · 공장 면적, 폐수 발생량 등 입지규제 완화 ·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 증설 제한규모 완화
▪ 11. 3월	첨단업종을 규정한 관련 법 개정 ·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156개 업종→277개 업종)
▪ 12. 4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16.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지역에 수도권 추가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균형발전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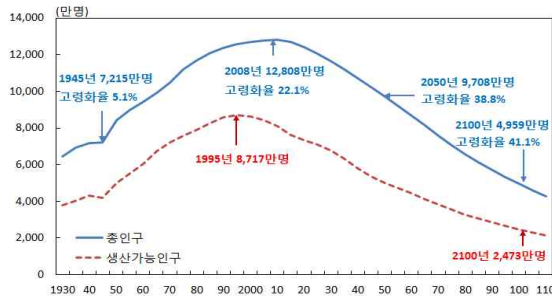
<별첨 1>

일본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리스크

□ 일본 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 9,708만명, 2100년 4,959만명을 기록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도 1995년 8,71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감소로 전환(2100년 2,473만명)

일본의 인구



자료: 일본 통계청,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

(만명)

	2010	2040	2060	2090	2110
총인구	12,806	10,728	8,674	5,727	4,286
고령인구 (65세 이상)	2,948	3,868	3,464	2,357	1,770
고령화율(%)	23.0	36.1	39.9	41.2	41.3
생산연령인구 (15~64세)	8,174	5,787	4,418	2,854	2,126
유소년인구 (0~14세)	1,684	1,073	792	516	391

자료: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일본의 장래 인구 추계」(2012.1)

□ 일본 전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자체 시산)는 2015년말 0.41로 지방소멸 위험 단계(0.50 미만)에 진입하였으며 2080년에는 0.20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

○ 47개 광역 시·도중 소멸 위험단계 지역은 45개(2015년말)로 전체의 95.8%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

○ 1,811개 기초지자체(후쿠시마현 제외)중 소멸 위험단계 지역은 1,606개(2015년 말)로 전체의 88.7%를 차지(2040년 1,809개)

전국 소멸위험지수 추이



자료: 일본 자료로 자체 시산

광역 시도별 소멸위험지역¹⁾

	(개, %)				
	'00	'05	'10	'15	'20
소멸 주의	38	29	30	2	0
소멸 위험	4 (8.5)	18 (38.3)	17 (36.2)	45 (95.7)	47 (100)

주 1) 47개 광역 지자체 기준
자료: 일본 자료로 자체 시산

기초지자체별 소멸위험지역¹⁾

	(개, %)					
	'15	'20	'25	'30	'35	'40
소멸 주의	589	203	92	41	16	9
소멸 위험	1,606 (88.7)	1,718 (94.9)	1,770 (97.7)	1,795 (99.1)	1,802 (99.5)	1,809 (99.9)

주 1) 1,811개 기초지자체 기준
자료: 일본 자료로 자체 시산

<별첨 2>

일본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리스크 대책

- **일본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 대책을 경제 및 재정 운영과 개혁의 핵심과제로 설정**
 - 저출산·지방소멸 리스크를 국민 전체가 공유하고 향후 안정된 인구규모 확보
 -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과 지방 활력 촉진을 통한 도쿄 일극집중 경향을 방지할 종합정책(「長期ビジョンと総合戦略」, 일본 내각부, 2014.11월) 추진
- **특히 일본은 인구감소 사회에 대한 대응, 도쿄 일극집중에 대한 대책 등 두 트랙으로 정책역량 집중**
 - **(인구감소 대책)** 기존 합계출산율이 아닌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희망출산율*」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정책 목표화
 - * 희망출산율=[(기혼자 비율 × 부부의 예정 아이 수) + (미혼자비율 × 미혼자 결혼희망 비율 × 미혼 여성의 희망자녀 수)] × 이별 등 효과
 - **젊은 층의 결혼, 출산, 육아에 지장을 주는 위협요인을 제거**
 - 젊은 층이 가정을 이루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수입의 안정, 육아* 등을 지원
 - * 남성의 육아참가를 촉진하고 장시간 노동을 개혁
 - **(수도권 일극집중에 대한 대책)** 지방 인구감소의 최대요인은 젊은 층의 대도시로의 유출이며 이는 국가 전체의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젊은 층의 인구이동 패턴에 변화를 줌으로써 수도권 일극집중 방지
 - **젊은 층에게 매력있는 지역거점도시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시책 지원**
 - **【인구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집적구조 구축】** 「컴팩트 거점」과 「네트워크」형성, 지자체의 「지역연계」, 「지방법인과세개혁」 등
 - **【지역경제 지원 기반 구축】**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육성, 장인의 지방으로 이주 지원,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 **【지방 이주를 위한 매력구축】**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방기업 취업지원, 「전국이주지도(map)」 제작, 고향납세(후루사토납세) 추진, 도시로부터의 지방 이주자 지원 우대세제, 관광진흥 등

< 참고문헌 >

김정환(2015),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김대성(2016)外,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_____(2017) “한국의 지방소멸 2: 2016. 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미간행 자료

박승규(2017)外,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형수(2017)外,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_____ “지방 인구절벽시대의 ‘축소도시’문제, 도시다이어트로 극복하자”, 국토연구원

김중은(2016)外, “도쿄는 교외 지역부터 사라져간다”, 국토연구원

이상림(2017), “인구이동과 지역단위 인구변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동우(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노동연구원

충남연구원(2014),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_____, “2040년 충청남도 시·군 인구추계와 정책과제”

김태현(2014)外, “코호트 요인법을 이용한 시군구별 장래인구추계”

김상림(2005)外, “H-P 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인구추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2017),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_____조사국(2016), “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_____조사국(2016), “인구구조 시리즈[3]: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_____광주전남본부(2016), “인구절벽시대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이동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_____강원본부(2014), “일본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시사점”

_____대전충남본부(2016), “대전·충남지역의 역내외 소비현황 및 시사점”

_____대전충남본부(2012), “충남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미즈비씨총합연구소(2016), “人口と経済の持続可能性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

増田寛也(2016), “人口減少社会の設計図”

MASUDA Hiroya(2015), “The Death of Regional Cities: A horrendous simulation
Regional Cities Will Disappear by 2040 A Polarized Society will Emerge”

OECD(2017), “Society at a Glance 2016”

<http://kosis.kr/>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ecos.bok.or.kr/> (ECOS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www.oecd.org/> (OECD 통계)

<https://esa.un.org/unpd/wup/CD-ROM/> (UN 통계)

<http://www.ipss.go.jp/>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ttps://www.zensus2011.de/> (독일인구총조사2011)

<http://www.stats.gov.cn/>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